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장애엄마 아이돌봄 절실한데...부처간 떠넘기고 대책 '감감'

[장애여성 양육현실②]

“장애를 가진 여성도 아이를 잘 키울 권리가 있다. 장애 엄마의 특수성이 반영된 서비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은 고사하고 아이의 손톱도 잘라 줄 수 없는 엄마들이 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다. 이들이 가장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지점이 ‘육아’다. 그래서 이들은 장애인이기 전에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을 요구한다.

장애여성권리취연대는 지난 5월부터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서비스 쟁취를 위한 서명과 1인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이용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여가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이용 금액의 최대 85%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연 720시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달로 치면 최대 60시간이고, 하루로 나누면 평균 2시간 남짓이다. 연 720시간 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시간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돌봄서비스는 ‘소득’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나뉜다.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세부 시행 규정에는 장애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여가부 “주무부처 아냐...타 취약계층과 형성성 어긋나”

복지부, 필요성만 강조...“아이키울 권리 보장돼야”



지난 7월10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여성권리취연대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은 있지만, 지원 금액이나 이용 시간에 대한 혜택은 없다.

장애가 없는 부모들에게도 어려운 육아를, 장애가 있는 부모들도 똑같은 정부 지원 조건 아래서 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분명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범위는 확대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돌봄서비스는 시간제의 경우 지난해 최대 600시간에서 올해 720시간으로 늘어났다.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도 지난해보다 더 넓게 포함됐다.

확대된 정책에 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

한 지원은 없었다. 여가부 측은 이와 관련해 “아이돌봄서비스는 특정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애 여성 분들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만 더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부모 가정 등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체가 보편 복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부모 가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다.

여가부가 장애인 부모 가정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장애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고 장애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여가부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없다는 입장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장애 여성들은 장애인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기본권이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취연대 대표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으로서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다”며 “그냥 그들(여가부)에게는 우리가 장애인일 뿐인 것 같다”고 한탄했다.

장애 여성들의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2017년)’ 보고서를 보면 이미 “자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사회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당시 보고서엔 “지금까지는 장애 유형과 장애 등급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 대책과 서비스를 수립해왔다”며 “향후에는 장애인의 자녀 수, 자녀 양육 조력자 유무 등을 고려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대책이 제시돼있다.

그러나 이후 장애 여성들을 위한 육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박진 함께사람 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센터장은 “한국의 성 평등 이야기는 2017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아직 장애 여성은 그 (담론)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해 해부터 여성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서울=김원호 기자

광주 광산구, 다문화가정 위기 해소 민·관 협력회의



광주 광산구는 최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3차 솔루션 회의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광산구 담당 공무원과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적

장애인협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 등 1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다문화·장애·정신건강 등 복합적인 위기에 노출돼 있는 한 세대의 위기상황 해소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 분야별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지원을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겪는 문화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며 “통합사례관리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보성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 우울증·자살예방 교육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460명 대상 ‘우울증 없는 건강한 백세 맞이하기’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연우)는 지난 26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460명을 대상으로 노인 우울증·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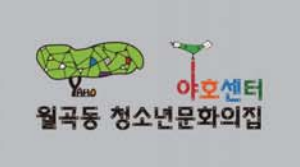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우울증 없는 건강한 백세 맞이하기’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별교삼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진형 원장을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연우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교육을 통해 노인 우울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우울증 및 자살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올바른 대처법을 찾는데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올해 88회 1,637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보성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연계 및 센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